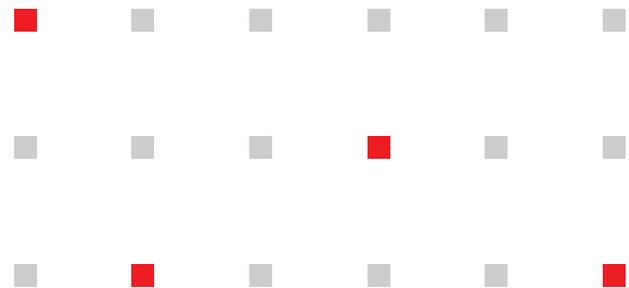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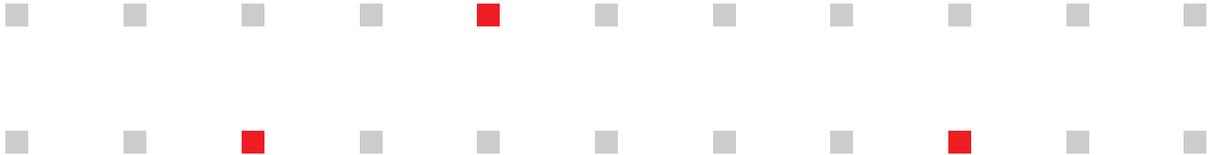
도-시·군 소통협력 강화방안



연구진 이 동 기 연구위원
base@jd.re.kr

제1장 | 소통협력의 개념 및 영역

제2장 | 도-시·군 소통협력 강화방안



Issue Briefing

Contents

도·시·군 소통협력 강화 방안

I. 소통협력의 개념 및 영역

1. 소통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 3
2. 소통협력의 정책영역 4
3. 도·시·군 소통협력 운영 현황 5

II. 도·시·군 소통협력 강화방안

1. 목표와 추진전략 7
2. 핵심사업별 추진내용 7
 - 1) 제도운영적 측면 7
 - 2) 재원 및 자원 측면 12
 - 3) 행태적 측면 15
 - 4) 전문가 의견 15

※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
※이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.jd.re.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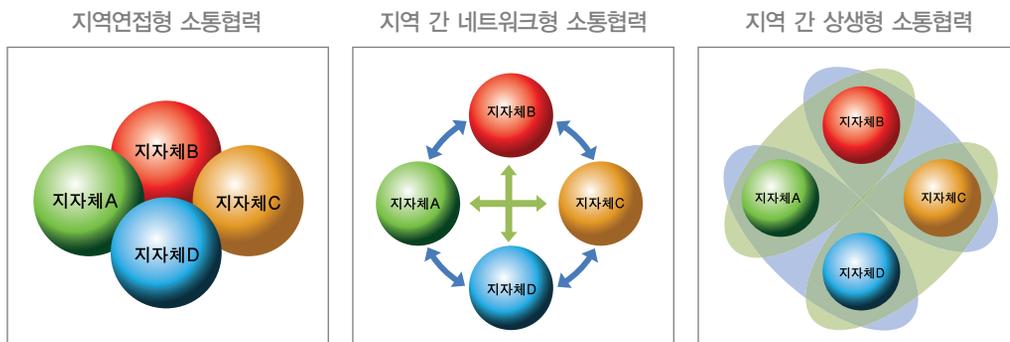
제1장 소통협력의 개념 및 영역

민선 5기는 성과 및 성장 중심의 효율성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상생을 촉진하는 도-시·군간 소통협력이 중시되고 있어,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-시·군 소통협력 중심의 도정운영 모색

1. 소통협력개념 및 필요성

○ 소통협력개념

- 소통의 사전적 의미 : 막히지 아니하여 잘 통합,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
- 소통협력의 개념 : 둘 이상의 지자체가 각자의 목표를 공동으로 성취 하고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, 관리하는 활동으로 동의와 협력을 찾아가는 과정
- 소통협력의 유형 : 지역연접형 소통협력, 지역간 네트워크형 소통협력, 지역간 상생형 소통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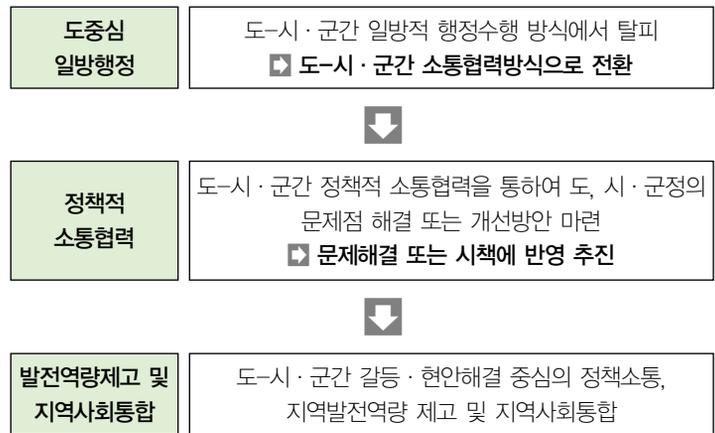


○ 도-시·군 소통협력 필요성

- **【도정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】** 민생·일자리, 새만금 등 민선5기 도정 핵심사업의 정책적 협력과 행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-시·군 간 동반자적 소통협력 필요
- **【지역역량강화 및 지역사회통합】** 도-시·군간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역량을 극대화하고, 고질적 장기갈등·애로사항 관리·조정을 통한 지역사회통합 도모

- 【미래 선도적 대응 및 전북발전 견인】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, 균형화 전략 등을 통해 미래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-시·군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, 정책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선도적인 정책추진

〈기본형 설문문항 개발〉



2. 소통협력의 정책영역

○ 정책영역 : 도-시·군간 소통협력의 정책영역은 예산, 인사, 사업, 제도, 정보, 행태 등임

- (예산) 소통협력에서 가장 많이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,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협력유도
- (인사)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일정 기간 동안 자치단체간 상호간 교류하여 협력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
- (사업) 복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및 개별적 단위에서 주민 공공 복리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됨
- (제도) 소통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 행태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형성된 것을 의미함
- (정보) 자치단체간 필요한 정책, 사업, 현안 정보 및 지식 등이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지역의 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위
- (행태) 자치단체장 및 해당 공무원, 의회 등이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을 주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인식과 부정적 행태를 전환하여 긍정적으로 합의 형성하는 것을 의미



○ **소통협력방식** : 조직체 구성을 통한 소통협력방식과 조직체 구성없는 소통협력방식으로 구분



3. 도-시·군 소통협력 운영 현황

1) 제도적 측면

- 전라북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(분기)
 - 도정현안 효율적 추진방안 및 도-시·군간 공동협력사업 발굴·조정
 - ※ AI·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수립추진,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방안 협의 등
- 시·군, 부시장·부군수 소집회의(매월)
 - 주요 국·도정 주요현안사업 추진방안 토의 및 추진상황 점검
 - ※ 지방재정 조기집행, 희망근로사업 등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 등
- 도-시·군 기획실장 회의(매월)
 - 도-시·군 주요현안 논의, 국도정 주요사항 시달 및 건의사항 수렴

○ 실·국별 시·군 대상 수시업무회의

- 실국별로 소관 현안업무 조정·조율을 위한 수시업무회의 개최

※ 새만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(도, 군산·김제시, 부안군, 농어촌공사)

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운영 협의회(도, 군산·김제시, 부안군, 지방경찰청, 농어촌공사)

2) 운영적 측면

○ 도 실과별 시군, 유관기관과의 현장소통행정(全직원 3現2廳 원칙)

- 과장급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형 현장행정, 담당급 이하 및 지원부서는 시·군 등 정책고객 대상 소통행정 추진
(주1회 이상)

※ 2009년도 추진실적 : 총 11,182회(현장 4,259, 소통 6,923)

○ 갈등사안별 문제해결 TFT 구성, 공동해결방안 모색

- 35사단 임실이전갈등, 무주-금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갈등 등 10개 TFT구성·운영



제2장 도-시·군 소통협력 강화방안

1. 목표와 추진전략
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속적인 소통협력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등을 통한 도-시·군간 긍정적 소통분위기 형성 ◆ 소통장애요인 및 시스템 개선으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
달 성 프로그램 (추진전략)	<p>【제도운영적측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실국 별 시·군 해당 부서와의 정례적 회의 운영 ② 시·군 건의사항 등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③ 정책소통협력지수 개발 및 평가(실국별) ④ 컨설팅 감사 도입 <p>【자원 및 자원측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도-시·군 맞춤형 인사교류 및 협약체결 ⑥ 실국별 도-시·군 전문가 포럼·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⑦ 도에서 시·군별 정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운영 ⑧ 사전타당성조사 기능운영 <p>【행태적측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소통아카데미 운영
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「시·군 정책협력담당」 조직 신설로 추진 체계 확립 ◆ 실행력 강화를 위한 「정책협력 관련 회의」 정례화 ◆ 시·군의 전문가 지원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「거버넌스」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정책포럼」 구성·운영의 참여확대 : 매월 1회 - 「상시관리시스템 및 정보공유시스템」 구축 ◆ 지속적인 평가 및 정책 환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소통협력지수 개발 및 성과평가

2. 핵심사업별 추진내용

1) 제도운영적 측면

- ① 도 실국별 시·군 해당부서와의 정례적 회의 운영

○ 목적

- 도-시·군 공통관심사항, 시·군 현안 및 시책사업 등을 의제로 선정하여 실국별 시·군 해당부서와의 정례적인 회의(월1회)를 운영하여 도-시·군간의 소통시스템 구축

○ 추진방식

- 정례회의 및 찾아가는 현장회의 운영
 - 도청 일변도의 회의장소에서 벗어나 시·군 현장중심의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장소도 시·군 순회 추진
-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
 - 도-시·군 현안 문제에 대해 전문가, 도-시·군이 참여하는 수평적,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하는 워크숍 추진
 - 실국별 정책기획 단계부터 시·군과 협의 추진하고, 사례발표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, 의견수렴 등 실용적인 워크숍 운용
- 추진주체 : 전라북도 실국 및 시·군 관련 부서
- 추진시기 : 2010년부터
- 예산 : 1억(도비)

② 시·군 건의사항 등 상시관리시스템 구축

- 시·군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 및 주기적인 관리, 전문가 등을 활용한 지원관리
- 지방자치정책협의회(분기 1회), 시·군 부단체장 회의(월 1회), 실국 및 시·군 회의(월 1회), 기타 시·군과 이루어지는 회의(수시) 에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시·군과의 피드백, 성과관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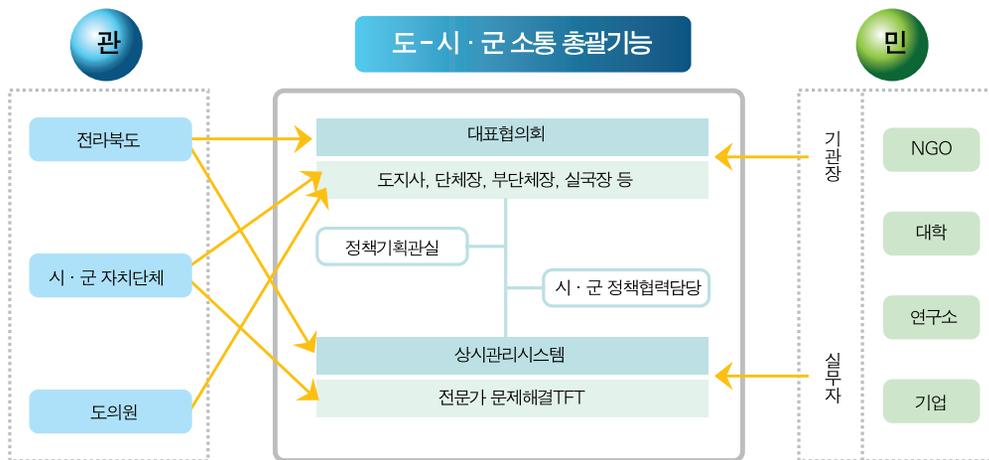
현 행 : 건의사항 취합→단순 처리 통보

개 선 : 건의사항 의제화→지속관리 및 성과평가

- 건의사항 해결 TFT 구성, 현지확인 및 해결방안 마련, 추진상황보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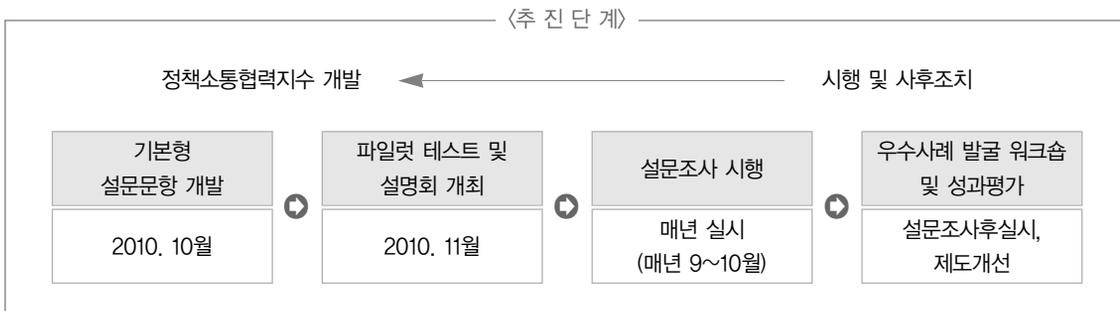
○ 정책기획관실에서 도-시·군 정책소통 총괄·조정기능 수행

- 시·군 정책협력담당 신설
- 시·군 정책소통 관련 업무 지정 요청 및 정례적인 소통회의
- 시·군 정책소통 결과 분석 및 성과평가, 만족도 추진, 인센티브 제공
- 정책소통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및 문제 해결형 TFT 구성
- 소통협력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



③ 정책소통 협력지수 개발 및 평가(실국별)

- 도-시·군간 평상시 정책소통 활성화로 도-시·군간 정책협력, 시·군의 현안사업, 건의사항의 파악, 해소 등에 대한 소통변화 정도 및 만족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정책소통협력지수 개발
- 도-시·군간 정책소통협력에 대해 향상 및 긍정정도를 비율로 측정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드백
- * 설문조사 결과와 반영내용,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례적으로 보고



○ 추진계획

- 추진주체 : 정책기획관실
- 추진시기 : 2011년 부터
- 예산 : 1억(도비)

④ 컨설팅 감사 도입

○ 도에서 주관하는 감사를 사후감사,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이며,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개선대안을 제시 해주는 컨설팅 감사 방식 도입

- 컨설팅 감사 : 적발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, 행정운영에 도움을 주며, 파트너십-스폰서십을 형성하는 대안 제시 위주의 감사방식

- 컨설팅 감사방법

【사전예방 및 대안 중심의 감사】 대상 공무원들로부터 담당 업무의 애로사항이나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수렴하여 개선방안 제시하는 감사

【자율적이고 책임지향인 유도 감사】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될 경우 기관장에서 일임해서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

【적극적 감사】 감사결과 잘못된 점이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 등을 인지되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내용을 기관에게 알려 상호 소통하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컨설팅 감사

○ 컨설팅 감사 추진 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책진단 및 상호토론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식을 함양하고 실무역량을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방식을 개선

- 그간 도의 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, 시·군의 경우도 도의 감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

컨설팅 감사 도입 사례

■ 행정안전부

(사례) 업무처리 행정정보시스템 D/B(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등)에 D/B분석기법(비리유형 시나리오)을 연계하여 위법행위 적발(단, 사후적 감사로서 한계),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자(DB)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자에게 환부한 지방세 횡령 2건 16억원 적발('09년 경기도 전산감사)

(실적) 최근 5년간 경기도 등 12개 기관 전산감사를 통해 지방세 추징 등 5,536억원 추징, 전산감사 도입전 3년간('02·'04) 서면감사 64억 대비 70배 성과

■ 경기도

(내용) '10년부터 감사패러다임을 컨설팅 감사로 전환, 지적위주에서 개선방안 제시형 감사방식으로 운영,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

■ 울산교육청

(내용)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 및 부작용 최대한 관용, 현안사업 및 문제점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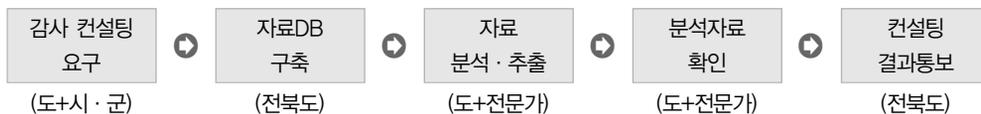


○ 추진내용 및 체계

• 상시 감사 컨설팅시스템 운영

- (목적) 도 및 시·군이 해당사업 및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법리해석의 오해 및 적용의 어려움,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도 감사관실에 의뢰할 경우 컨설팅을 수행
- 사전에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예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가 시각에 의한 대안 위주의 새로운 상시감사컨설팅 시스템 운영
 -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현황 및 과거 감사과정에서 축적된 감사사례 및 감사유형을 시나리오별로 분석, 상시컨설팅 자료로 활용, 제공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

• 추진체계



• 플리바겐(Plea Bargain)제도 도입

- (목적) 감사 기간 중 수감 기관 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 업무과실이나 애로사항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등 최대한 관용 조치 및 조정하는 제도로,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 내 비리를 근절, 업무의 성실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함
- ※ 플리바겐 : 미국법상 유죄형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

• 현장 감사 및 감사협의제도의 운영

- (현장감사) 서면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예산낭비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전환
- (감사협의제도) 감사실시 전에 시군과 감사목적 및 감사분야, 일정, 운영방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감사 부담 최소화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
- 추진주체 : 감사관실

2) 재원 및 자원 측면

⑤ 도·시·군 맞춤형 인사교류 및 협약체결

○ 목적

- 도·시·군간 이해증진을 통한 정책협력 및 소통 촉진을 통해 지역발전 및 행정운영의 시너지 효과 제고로 경쟁력 강화
- 도·시·군간 맞춤형 인사교류는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경험을 결합시켜 정책 실효성 및 추진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식·정보 교류, 인적네트워크 확대로 행정역량을 강화

○ 추진방식

• 맞춤형 인사교류(1 : 1 상호교류)

- ▶ 개념 : 도·시·군 인사교류 시 부서나 직위를 명확히 하여 근무지 이동이나 업무변경에 따른 부담감을 없애고, 상호파견을 통해 인사교류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
- ▶ 방식 : ① 4~6급 공무원의 1대 1 맞교환, 파견 교류 (기간 최대 2년)
② 전출입 교류(장기적 교류)
③ 권역별 파견교류(권역별로 시군간 인사교류)
- ▶ 선정기준 : 수요조사 조사 실시, 업무연관성 및 협조필요성, 정책수요측면이 큰 직위
- ▶ 인센티브 : 원소속기관 복귀보장, 성과평가 가점 부여, 교류수당 지급
※ 교류수당 : 3급70만원, 4급60만원, 5급이하55만원(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)

• 도·시·군 인사교류 협약 체결

- ▶ 도·시·군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의 정당성 확보 및 교류자 신분보장, 성과확보를 위한 기관간 교류협약서 작성 및 교환
※ 추진주체 : 행정지원관, 도지사-시장·군수 협약 체결

• 도·시·군 인사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운영성과평가

- ▶ 도·시·군의 인사교류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임용자의 근무상황 및 운영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, 고충해소 지원
※ 간담회·워크숍(연 1회), 교류임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성과평가응역(전발연)



⑥ 실국별 도-시·군 전문가 포럼, 자문단 구성 및 운영

○ 목적

- 전문가의 정책 기획, 자문 참여 등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정책포럼에 시·군 관련 부서 직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-시·군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속적인 시·군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
- 도-시·군의 주요 사업 수립 및 집행 시 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실국별 전문가 공동자문단을 구성하여 도 및 시·군의 현안 해결
- 전라북도 4대포럼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가 포럼, 기추진되고 있는 포럼 등에 해당 시·군 공무원의 참여확대
 - ※ 전북재정포럼의 경우 전문가 및 시·군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정보교환 및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소통 구조를 형성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설정

○ 정책포럼(안)

구분	포럼명	주요기능
1	일자리창출포럼	•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제안 및 고용창출 의제 발굴(우수사례발굴, 협력체계)
2	민생경제포럼	• 민생관련 주요정책의 개발, 중장기 계획의 수립, 자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
3	새만금포럼	• 효율적내부개발, 투자유치 촉진, 대외협력 등 •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대책 사항 등
4	소통포럼	• 소통의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• 소통 활성화를 의견 수립, 분야별 소통강화를 위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5	관광포럼	•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, 사업발굴 • 새만금 및 주요 관광개발 사업방안 등
6	재정포럼	•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
7	동부권포럼	• 동부권 지역의 주요 사업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등
8	농업농촌포럼	•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, 정책발굴 및 사업 추진체계 구성 등
9	여성포럼	• 여성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정책의 현안 분석, 사업 추진 방안 등
10	다문화포럼	•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계획 수립, 시책사업 발굴 등

○추진주체

- 추진주체 : 전북발전연구원 및 전라북도
- 추진시기 : 2010년 하반기 부터
- 예산 : 3억(도비)

⑦ 도에서 시·군별 정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

○목 적

- 소통협력의 촉진을 위한 도·시·군간의 정책 및 현안 사업 등에 관련된 지식, 정보 등이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
- 우수사례 및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의 공유 확산 공간 마련
- ※ 공감코리아(www.korea.kr) : 정책정보, 일자리 정보, 정책포커스 및 이슈, 브리핑룸
- ※ 정책공감 블로그(blog.naver.com/hellopolicy.do) : 김선생의 정책!교시, 황박사의 심층분석, 이기자의 시사비비, 정책공감인터뷰, 웹툰풍아네집



○추진체계

- 추진내용 : 전북소통어울림(가칭)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
- 추진주체 : 홍보기획과, 시·군 담당부서
- 예산 : 5억(도비)



⑧ 사전타당성조사 기능 운영

○목적

- 시·군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, 타당성 인정 시, 시·군 사업 예산 지원

※ 총사업비 규모가 200억원이상 사업들 중에서 도비 20억이상 포함된 사업

○추진체계

- 사전타당성 조사 : 전북발전연구원 및 예산과

- 추진시기 : 2010년 하반기



3) 행태적 측면

⑨ 소통아카데미 운영

○행정지원관실 : “소통 아카데미” 개설, 매월 순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 초청, 소통강좌를 통한 소통마인드 함양 및 도-시·군간 소통 우수사례 등 공유

○공무원교육원 : 정구교육과정에 소통과정 신설, 다양한 소통 함양교육

※ 소통협력의 이해, 소통프로세스관리, 소통협력추진매뉴얼, 소통협력지수 등

4) 전문가 의견

■군산대학교 유금록 교수

- 시·군 소통협력은 현재 시점에서 도의 역할이 매우 필요함. 이를 위해서는 도의 권위적인 행태 및 문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- 시·군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 비전공유가 추진 필요. 이를 통해 시·군과의 공통관심을 추진함으로써 적절한 운영방식 결정
- 인사교류는 시·군 소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. 단순한 인사보다는 능력있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과의 교류가 필요하며, 파견교류 및 진출입 교류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
-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,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는 것처럼 추진 예정인 사전타당성 조사는 추진요구되는 사업임
-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필요한데, 그런 차원에서 공동 정책자문단 운영은 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, 열악한 인적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시·군에게 도움이 될 것임

■ 호원대학교 송재복 교수

- 시·군 소통의 전제조건은 열린 문화와 자유스러운 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함. 또한 업무 추진 방식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함.
- 시·군 소통에서 인사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추진방식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야 함
- 시·군과의 소통에서 사업에 대한 공동결정방식도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, 시·군의 공동문제를 해결을 위해 현장 순회 협의제도 필요함
- 소통을 통해 도출된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소통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학습하는 조직이 형성되어야 함

■ 전북대학교 안국찬 교수

- 도·시·군간 소통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며, 이러한 접근을 통해 소통 채널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임
- 추진 예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

■ 서남대학교 강용기 교수

- 시·군 소통을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.
- 소통구조의 설정에서 현재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며, 쌍방향적으로 업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
- 지리산권 관광개발협의회처럼 특정 목적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도 시·군 공무원들을 파견, 운영하여 소통을 하도록 함
- 시·군 소통 담당 채널이 정책소통담당관제를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. 담당관제를 통해 도와 시·군간의 긴밀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, 피드백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